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4대보험 통합 징수 연내 입법

정부, 업무 일원화...11월 말까지 국회 제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법률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도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

일부터 통합하는 내용의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유시민(柳時敏) 복지, 이상수(李相洙) 노동, 장병안(張秉浚) 기획에산재장관,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 진군표(金君杓) 국제청장, 청와대 김용익(金容益) 사회정책수석, 이해경(李惠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백화점 판매원들의 비결

“지갑 열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

백화점 판매원들은 눈빛이나 행동만으로도 물건을 살 의향이 있는 고객을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백화점이 판매실적과 고객관리능력이 우수한 '에이스 매니저'로 선정된 스태프 290명을 대상으로 '판매원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0%가 구매의도가 있는 고객을 알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35.5%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빛만 봐도 물건 사러온 사람인지 둘러보기만 할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상품을 많이 꺼낼 때(26.9%)와 거울 앞에 서있는 시간이 길 때(17.9%)도 의도를 알아챌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사이즈를 확인할 때(9.3%), 둘러보고 오랫동안 고객이 다시 왔을 때(5.2%), 요즘 잘 나가는 상품이냐고 물을 때(3.4%), 처음부터 서슴없이 상품에 대해 비판할 때(1.7%)라는 답도 나왔다.

판매원의 33.1%는 물건을 살지 말지 말살이는 고객을 설득하는데는 '잘 믿어보시라니까요?'라며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이 밖에 '읽어보이세요?'(24.5%), '날씬해 보이세요?'(16.2%), '패션감각이 모델 뻘치세요?'(12.1%), '웃보다 모델이 더 훌륭하시네요?'(7.2%) 등의 접대성 멘트도 잘 통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 72%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액 낮춰야”

상의, 1,485업체 조사

국민연금 제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액을 모두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기업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제정의 안정화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71.9%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급여액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는 응답도 응답업체의 88.6%에 달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현재 9%)은 '5~7% 미만'(37.8%), '5% 미만'(34.6%)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현재 60%)과 관련,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과거 평균소득의 40~50% 미만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55% 미만(23.0%), 55~60% 미만(15.3%), 60%이상(14.8%), 40%미만(9.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88.0%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타 공적연금의 '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취업자수 증가폭 20만명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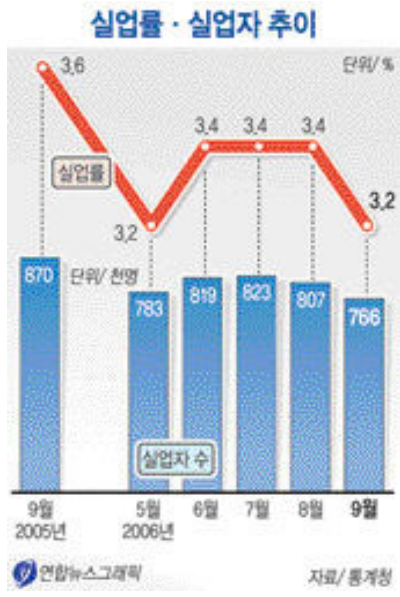
광주·전남 취업자수 3천명 감소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가 3천명 감소하는 등 전국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는 62만3천명으로 1년전보다 1천명 줄었고, 전남 취업자도 92만7천명으로 2천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8월 31만8천명을 기록했으나, 9월에는 다시 28만2천명이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연간 일자

리 35만개 창출 목표치 달성은 더욱 힘들게 됐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2만5천명으로 1년전보다 2천명 줄었으며, 실업률은 3.9%로 0.3%p 하락했다. 3·4분기 청년실업률은 10.5%였다. 전남지역 실업자는 1만6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6천명 줄었으며, 실업률도 1.7%로 0.6%p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6.1%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6 우수농축산물대전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6 우수농축산물대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사과, 대추, 굴 등 우리농산물로 장식된 한반도 모형 전시물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율 63.7% 'OECD 평균 이하'

“비경제활동인구 1,400만명...인적자원 낭비”

통계청 국가자료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데 따른 것으로, 이를 더 이상 방지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낭비로 지적됐

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질의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실업률이 3.9%(올해 8월 3.6%)로 OECD 국가 평균인 6.7%보다 2.8%포인트 낮고, 2002년부터는 매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30개 OECD 회원국 중 2002년 이

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7%에 그쳐 OECD 평균인 65.5%에 못 미치는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고용률이 75%를 넘는 아이슬란드(84.4%) 등 최상위 그룹과는 15~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수준의 실업률에도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기준(15~64세 인구 기준)으로 작년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3.7%인 1천139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따른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취업 장애인 중도퇴직 많다

2003년 이후 취업자 절반 이상 그만둬

정부 지원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취업한 장애인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

당 장항숙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지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3만1천326명 가운데 1만7천936명(57.3%)이

일 자리를 그만뒀다. 이들 퇴직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1만1천344명(63.2%)이나 됐고, 8천103명(45.7%)은 한 달도 채 못 돼 퇴직했다. 장애인 취업자의 장애 유형은 중증 남성 장애인이 1만2천34명으로 67.1%를 차지했고, 다음이 경증남성 장애인(8천197명), 중증 여성 장애인(6천402명), 경증 여성 장애인(4천69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보험사에도 예·적금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을 들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험사의 경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통화자산관리업(자사 보유자산에 한정)과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경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보험법 개정안은 일단 보험사의

경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부수업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박영준 보험제도과장은 "보험사 본·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고 유통화자산관리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기의 정의와 유형을 신설하고 금융감독국의 사기조사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2중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간소화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위기관리 프로그램 가동 검토

전경련, 북핵 긴장 고조 대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핵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한반도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될 경우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주요 대기업 북핵관련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북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계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제재와 북한의 대응에 따라 경제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일단 기존의 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해외거래처의 안정적 관리와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에도 힘쓰기로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companies like Shinil, GM, and others.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발전 5사, 인건비 5년 새 두 배

경영효율성 후퇴

한국전력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실시한 발전 5개사 및 원자력 1개사 분할 이후 인건비 증가와 경영효율성 후퇴 등이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성문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발전사 분할 이후 한전 및 자회사의 임직원 수는 약 4천명 증가했고 여러 자회사가 생기다보니 임원 수

는 같은 기간 8명에서 34명으로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천664억원이었던 인건비도 2005년에는 4천973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구조개혁 성과가 부진함에 불구, 한전과 6개 발전사의 1인당 평균 연봉액은 2000년 3천511만원에서 2005년 5천510만원으로 57%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은 같은 기간 439만원에서 1천42만원으로 무려 137%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